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 현안과제와 해결방안

沈 昌 求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요기(療飢)의 시대에서 풍요(豊饒)의 시대로 변한 오늘 우리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 · 향상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변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오늘날에는 식량의 증산을 위하여 농약 등 위해개연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으며, GMO 등 신소재 성분이 대량 생산 · 유통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식생활 pattern도 단체급식 · 외식 등으로 바뀌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도 이후 광우병(BSE), 다이옥신 사건 및 병원성대장균 0157:H7에 의한 집단식중독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정부의 신뢰도까지 위협을 받게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및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 과학화를 위하여 체계와 제도 등을 이미 개선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안전성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주로 식품안전관리 다원화에 따른 업무수행의 비효율성, 법률 · 규정 · 제도의 미비, 유통식품의 관리 및 교육의 부족, 식중독 발생 방지대책의 불완전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미흡 등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다원화는 국가인력,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거나 자원의 낭비요인을 발생시키고 책임성 · 능동성 · 일관성 등이 결여되며 미관리 분야(Gap)가 생기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 이슈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Consumer)의 시각, 바꾸어 말하자면 식탁(Table)의 시각에서 식품 안전 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부터 한 다음 마지막에 안전성을 평가받는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의 안전(즉 식탁에서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는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식품의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업무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규제에 따른 생산자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된 위해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등 제반업무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계의 추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 규제 조치(source direct measure)를 통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발생시 이들 위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신속 조치 체계(rapid alert system)를 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에도 위해분석(risk analysis),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 principle) 및 추적성(traceability) 등의 최신 과학적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 등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에는 사회 · 시민단체 등 NGOs 와의 상호 보완적 협력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은 규제자(정부기관 등)의 노력만으로는 확립될 수 없을 만큼 주변 환경이 급변하였고, 위해요인이 다양화 · 광역화되었다. 따라서 생산자 ·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위생의식이 향상되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식품안전에대해
> 정부는국민의기대욕구에부응할수있도록
> 인력 · 예산등국가자원을
> 식품안전이라는국가적과제에투입해야할것이다.
> 아울러식품은모든국민각계각층이
> 일상적인소비자인점을감안하여
> 전국민이식품안전을위한환경조성에
> 적극합력하여야할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식생활 행태에 편승하여 식품성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이나 약물을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등 고의적 악질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로 부정 불량 건강 식품의 제조 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의 가능성은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악질적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이들 부정 불량 물질을 신속히 screening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보 · 고발 등에 의한 기획 · 기동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상존한다. 또한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방지대책도 과학적 · 체계적으로 수립 ·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 박탈하고 징계함으로써 위법의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최근 식약청은 철저한 단속과 처벌(인신구속)을 통하여 주요 일간지에서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시키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이는 위법의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금년도에 식약청은 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식중독 포함)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학교 주변을 식품위생의 안전지역으로 변화시키는 Safe Food, Safe School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가짜 고춧가루나 가짜 참기름 등의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검사, 감시 및 규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위생관리 규범 및 지침 등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식품 관련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 즉 규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107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수입해서 섭취하고 있다. 이미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에서 차지하는 열량점유율(calorie base)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제 국내 생산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규제만으로 우리 식탁의 안전성이 지켜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생산 식품과 달리 생산환경 · 규정 등이 상이한 환경에서 재배 · 생산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지에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현재 식약청은 중국 베이징에 1명의 식약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넓은 중국의 정보를 1명이 수집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많은 식약관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 파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늘어나는 수입식품을 합리적으로 검사 · 관리할 수 있는 관리 system을 정비하고 검사업무의 효율 ·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우선하여 수행함으로써 상대적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반면에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식품안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까닭에 오늘날 식품의 안전도는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식품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인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까지 작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 · 예산등 국가자원을 식품 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은 모든 국민 각계각층이 일상적인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민이 식품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합력하여야 할 것이다.